

1929년 원산총파업에 대하여

60주년에 즈음한 역사적 성격의 재평가

김 경 일

1. 머 리 말

올해는 1929년 1월에서 4월에 걸쳐 진행된 원산총파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원산총파업은 그 규모나 지속성, 그리고 노동자들의 단결성과 투쟁에서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식민지시기의 대표적인 노동쟁의로서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논문은 예상외로 많지는 않으며 또한 일정한 견제와 평가들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이후의 역사학이나 노동운동사 연구에서의 지적 편견과 편향을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분단현실 하에서의 학문적 작업의 성격과 지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일제하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원산총파업에 관한 역사적 의의나 성격이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특히 일제시기 전반에 걸쳐 노동운동의 정치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사회계급들의 편성과 대열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것이 노동운동 및 나아가서 민족해방투쟁에서 어떠한 의미할층을 지니는가 하는 점이 거의 주목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가 중요한 측면에서 상당 부분 잘못 제

金景一：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

시되거나 해석되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객관적 사실들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일제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원산총파업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다음의 각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원산총파업(이하 총파업으로 약칭)에 관한 연구들을 개괄해 보기로 하자. 먼저 총파업 당시에 운동가들에 의해 씌어진 팜플렛 형식의 글로서 대표적인 것은 당시에 이른바 방향전환론을 주장하고 이를 선도한 이른바 ML계 공산주의자인 김영두(金榮斗)와 이철악(李鐵岳)의 글을 들 수 있다.¹⁾ 김영두는 자신의 글에서 먼저 지도부인 원산노동연합회(이하 노련으로 약칭)를 조선에서 가장 우익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노동조합이라고 비판한다. 총파업에서 발휘된 노동대중의 강렬한 자연생장적 투쟁의식과 계급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그는 지배계급의 정치기구에 대한 단호한 투쟁을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자계급의 전위대로서 당의 역할에 대한 필요와 더불어 노동동맹의 결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후자인 이철악의 글은 사건 전개에의 기본적 골격은 당시 조선일보에 29년 2월 12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된 김동환(金東煥)의 글에 의존하면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첨부한 것이다. 이 글은 지도부의 개량성과 노동자의 혁명성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는 윗글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총파업의 내용과 경과 및 그것이 당시의 운동의 맥락에서 지니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그는 총파업의 의의를 단순한 경제투쟁이 아닌 정치적인 의미에서 조선의 무산계급운동과 일본의 프롤레타리아트에 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것, 민족혁명운동에서 급진적 민족부르조아지 내지는 일부 소부르조아지가 그 지도적 지위를 상실하고 노동대중이 그 무대의 전면에 진출한 것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경제적 및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라는 점을 깨닫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 등에서 찾는다. 각 계급의 동향과 전략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경과가 서술된 이후에 총파업의 경험으로서 산업별 노조의 건설과 조선과 일본

1) 김영두, 「개량주의와 항쟁하라—원산쟁의에 대하여 전조선 노동자대중에게」, 『현단계』 제 2호, 1929년 4월. 이철악, 「원산총파업의 경험」, 『공장』 창간호 및 제 2호. 김영두와 이철악은 각각 고경훈과 한위건의 필명이다. 이 글들은 배성찬 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돌베개, 1987의 235~46면, 348~75면에 각기 수록되어 있다.

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연대와 원조에 대한 필요가 주장된다. 위의 두 글은 당시의 운동의 맥락에서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었던 운동론의 정당성을 확인해 내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편향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적인 시각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총파업의 인식에 중요한 의의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팽플렛적인 선전선동의 성격이 강한 전자의 글을 논외로 한다면, 후자의 글은 주장된 각 계급들의 지위와 성격이 경과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추적, 확인되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인 사실의 제시와 해석에서도 필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다음에 해방 이후의 것으로서 주요한 것은 강동진(姜東鎭)과 김운환(金潤煥) 및 김종렬(金重烈)에 의한 연구 등²⁾을 들 수 있다. 강동진의 연구는 해방 이후 이 방면에서 선구적인 업적으로서 이후의 연구들의 논의도 기본적으로는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그가 총파업의 의의로서 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항일 민족해방투쟁의 일환으로서 전개된 것이라는 점 및 일제의 가혹한 탄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의 운동양상이 비합법투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는 점 등이다. 김운환의 글도 크게 보아 이러한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김종렬의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크게 의존해왔던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당시 관계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논의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파업의 발단과 경과가 원산의 자본가계급을 대표하는 원산상공회의소(이하 상의로 약칭)와 일제의 총독부 권력의 합작 계획에 의해 치밀하게 계산되어 은밀하게 진행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운동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아 주장의 타당성과 객관적 진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면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 연구들은 주로 총파업의 현상적 기술에 치중하고 있다. 일제하 사회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노련의 초기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의적이며 노동자들에 의한 반일 민족해방투쟁으로서의 성격에 대

2) 강동진, 「원산총파업에 대한 고찰」, 『한국근대사론 III』, 지식산업사, 1977, 237~66면. 김운환, 『한국노동운동사 I』, 청사, 1981, 162~76면. 김종렬, 『항일노동투쟁사』, 집현사, 1978, 105~68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02~25면은 강동진과 김종렬의 연구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며 이외에도 전국부두노동조합,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 1979, 99~114면 등에도 개략적 경과가 소개되어 있다.

한 강조 및 이에 대한 전국민의 열렬한 호응과 성원에 비중을 두고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각계급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고려가 없이 이를 민족이라는 범주 안에 무차별적으로 해소시켜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운동에 대한 계급적 시각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본질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피상적으로 구체적 사실들을 이해한 결과 사실의 인식과 해석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왜곡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연구로는 윤형빈(尹亨彬)의 논문을 비롯한 연구들과 『조선근대혁명운동사』 등에서의 개략적 언급이 있다.³⁾ 북한에서의 연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윤형빈은 자신의 글에서 20년대 후반기에 일정한 투쟁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단련된 노동대중이 가중하는 일제의 약탈과 폭압 앞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진출을 지향하던 시기의 노동자·농민들의 대중적·혁명적 진출의 선구로서 총파업을 파악한다. 노동계급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의 차원에서 그는 조선 각계층의 인민은 반일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지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노동자계급은 거꾸로 이들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지주나 예속자본가, 친일분자를 제외한 농민, 소부르조아지, 양심적인 민족부르조아지 등의 광범위한 인민대중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지도 아래 반일 민족통일전선의 조직과 전개를 위한 객관적 조건을 성숙시켜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강력한 반일 정치투쟁의 조직·전개, 보다 적극적인 투쟁형태로의 이행, 광범한 반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실현 등 총파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이후 동만지역(東滿地域)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반일 통일전선과 당창건을 목표로 한 무장투쟁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이철악이 총파업을 계기로 급진적인 민족부르조아지 내지는 일부 소부르조아가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 대열에서 탈락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현실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식화 내지는 이상화의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역사인식이다.

마지막으로 전후 일본에서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단편적인 언급

3) 윤형빈, 「1929년 원산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그 교훈」, 『력사과학』, 1964년 제2호, 32~48면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 1964(한마당, 1988, 212~4면 참조).

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총파업만을 본격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코바야시(小林英夫)와 카나모리(金森襄作)의 연구⁴⁾를 들 수 있다. 코바야시의 연구는 그 기본적 골격과 문제의식을 앞의 북한에서의 윤형빈의 글에 크게 의존하면서 총파업에 대한 북한에서의 공식적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의 글은 60년대 중반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일본의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평가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카나모리의 연구는 코바야시보다 10여년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은 29년의 총파업을 그 이전의 27년 6월의 파업과 밀접하게 관련시켜 계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두 파업과 28년 10월 영흥(永興)에서의 총파업을 지역적으로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시기 지역적 노동연합의 형태가 식민지적 특수성에 적합한 조직이었다고 평가한다. 27년 6월의 파업은 그 조직형태의 적합성을 입증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서 29년의 총파업은 27년 파업의 단순한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는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의 보편성을 특수성의 범주로 해소시켜버렸다는 점,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년대 후반 이후의 산별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 등에서 이 글과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카나모리의 연구는 역사적 인식과 사실의 해석에서 중대한 오류와 심각한 왜곡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절들에서 검토되겠지만 여기서는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만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다. 이는 비단 그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인 연구자들에게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심각한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에서 카나모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총파업이 시작될 당시에 일제는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노련에 대한 탄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중렬의 글에서 보듯이 일제는 원산 상의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처음부터 노련 박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 아래 파업의 발발과 함께 일제는 인근의 경찰은 물론이고 보병대까지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등 원산의 전시가는 계엄상태와 같은 공포분위기였다는 것은 당시의 신문이 보도하는 대로이다. 이러한 상태를 중립적이라고 말

4) 小林英夫, 「元山ゼネスト—1929年朝鮮人民のたたかい」, 労働運動研究會, 『労働運動史研究』, 1966년 9월 및 金森襄作, 「元山ゼネストと朝鮮の労働運動(1)~(3)」, 『朝鮮研究』, 1978년 3~5월호. 이 글의 개략은 그의 저서인 『1920年代朝鮮の社會主義運動史』, 未來社, 東京, 1985의 120~55면에도 소개되어 있다.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그는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는 통설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즉 당시의 노동총동맹이나 신간회 혹은 그 지방조직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노동연합회에서조차 자금모집이나 동정파업 등은 전혀 없었으며 또 이러한 지원은 당시 조직의 본질적 한계로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조선 프롤레타리아의 지원이 적었던 것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는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먼저 그는 지역적 노동연합에 의한 조직이 식민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한 운동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총파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노동자들에 의한 지원이 없었던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왜 당시의 운동자들이 원산노련의 지도부를 개량주의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파업이 궁극적으로 패배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 아울러 그는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성격과 그것이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산간벽지에까지 철저히 관철되고 있었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의 부족을 조직의 내재적 한계로 치부해버리고 그것이 본격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인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도 전국 각지의 노동자들이 보인 열렬한 성원과 원조들은 고려하지 않고 식민지와는 또다른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본의 노동자나 중국 영사의 단편적 몇몇 지원 사실들을 오히려 평가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안이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민족적 편견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2. 총파업의 발단과 경과

총파업이 28년 9월에 원산 교외에 있는 문평(文坪) 제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파업으로 회사측은 일정한 양보와 함께 3개월 이후의 해결을 약속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조합을 조직하여 노련에 가입하는 한편 약속한 3개월이 지나자 회사측에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책임회피와 기만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노련에서는 긴급 집행위원회를 열어 문평제유 노동조합은 1

월 14일을 기해 재차 파업을 단행하고 노련의 세포단체는 문평제유회사의 화물을 일체 취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노동자들이 화물을 운반하기를 거부하자 고용주측에서는 해고선언으로 이에 맞섰다. 이것은 17, 8일의 양일에 동정파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한 회사측에서는 원산경찰서장에게 조정을 의뢰하였다. 노련측에서는 해고선언만 취소하면 즉시 복업한다고 성명하였으며 경찰서장은 사건이 간단하다고 믿고 고용주측에 노련의 요구대로 해결하기를 권고하였는데 이때 운송업자들은 조정을 포함한 일체의 것을 원산상의에 일임하였다. 21일에는 운송업자들이 노련에 결연을 통지하는 동시에 뼈라를 뿌려 대대적으로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상의도 노련에 대하여 고용주측의 의뢰가 있었으므로 노련회원은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고 통고하고, 시내 곳곳에 뼈라를 붙여 노련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시켰다고 선전하였다. 상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노련에서는 상의의 중재를 거절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22일에는 긴급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한 끝에 각 세포단체의 자유의사에 일임한다는 형식을 취하여 23일부터 드디어 정식으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파업의 발단은 쟁의에 관계된 석유회사의 화물 취급을 거부했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한편 노련의 존재를 무시하고 새로이 노동자들을 모집하려고 했던 자본가측의 도발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20년대 합법적 운동의 장에서 확보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성장한 노동계급의 역량과 자기의식에 대한 완전한 무시와 모멸이었다. 자본가들은 불리한 사회여론을 의식하여 또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와 직접적 관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노련의 임금인상 요구가 노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한 원인이라고 선전하였다. 이들 주장의 요점은 노동자들이 단결의 힘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임금인상을 너무나 자주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을 쉽게 단행한다는 점, 따라서 이는 일반 시민의 생활에 불편과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원산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의 신문들은 사실의 은폐와 왜곡, 조작 등을 통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생각들을 널리 유포하였으며 부르조아 해계모니의 일환으로 그것은 쉽게 대중화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편견과 악의가 반영된 것이다. 그것은 여타의 사회계급들에 대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편견을 강화

함으로써 이들의 진출에 불안을 느끼게 하여 자본가 진영에 이들을 포섭하는 한편 노동자계급 내부에서도 지도부와 노동대중 사이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노련은 일찌기 13일에 일반 사회에 대하여 이러한 의도를 폭로하고 스스로의 입장을 선전하기 위하여 파업의 전말에 관한 이유서를 기초, 인쇄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압수하고 말았다. 14일의 파업 이후에 노련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하여 “세간에서 혹 맹파를 남용한다는 오해가 있을까 하여 부득이 또 맹파를 하게 된 전말 이유”서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이를 전부 압수당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 노동단체와 전조선민족에 대한 회사측의 모욕적 행위와 협약의 일방적인 배신과 배약을 비난하였다. 23일의 총파업 결정이 노련의 명령이 아닌 각 세포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한 형식을 취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지도부의 지령이 아니라 노동대중의 자발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거꾸로 이는 식민지 상황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편견이 그만큼 용이하게 자본계급의 의도대로 대중화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민지 경찰의 위협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과 동시에 노련은 자본가의 역선전에 대항하는 성명서를 23일에 배포하였다. 26일에는 파업의 책임소재를 천명하기 위해 「원산대중에게 고함」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상의가 연합회원 및 그 가족 1만여 명을 비시민인 듯이 여기는 행동을 감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보아 일반대중의 공평한 비판을 받기 위하여 상의에 대한 입회연설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을 대표하여 상의는 쟁의의 책임을 회피, 호도하는 기만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일제와의 긴밀한 유착 아래 원산매일신문 등을 통하여 노련에 대한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였다. 계급적 편견은 민족적 편견과 결부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경성일보나 매일신보 등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은 이러한 입장을 보다 뚜렷이 하였다. 전후 일본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편향은 계승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카나모리는 14일의 파업결정과 아울러 석유회사의 화물을 취급하지 않기로 하여 쟁의를 부두에까지 확대시킨 것은 “냉철한 판단을 결여하고 매우 감정에 흐른 안이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노동자들의 “극도의 흥분”은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가측의 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계급을 모멸하는 도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식민권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던 매일신보에서조차 이는 자본가측의 “기만

적 행위로서 노동자측에서 회사의 하물의 육양(陸揚)을 거절한 것도 달리 하등의 대항력이 없는 노동자측으로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⁵⁾이라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정당한 대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정적인 안이한 것으로 보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앞서서도 보았듯이 자본계급은 노동계급에 대한 도발과 탄압을 정당화하고 쟁의의 진정한 동기를 호도하기 위하여 하등 관련이 없는 임금문제 등을 구실로 노동계급의 입장을 왜곡선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모리가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상에 서서 노련을 비판하는 것⁶⁾은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의가 노련에 대하여 도발적 태도를 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노련이 파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이유는 그간의 연구들에서 어느정도 지적되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첫째는 노련세력의 증대에 대한 자본가측의 공포이며 둘째로는 제국주의 전쟁을 눈앞에 둔 일제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제하의 이철악과 북한 및 부분적으로 카나모리의 글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여타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보기로 하자.

전반적으로 보아 총파업은 일제가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준비, 감행하기 위하여 노동계급에 내던진 일대 결전이었으며 불행하게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방적인 선전포고였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던 노련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말았으며 이후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은 비합법운동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파업은 20년대 합법적 운동의 결산이면서 동시에 30년대 비합법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파업은 국제운수와 국제통운의 일본인 대자본가의 주도에 의해 이들의 위임을 받은 상의가 계급전(階級戰)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직전인 1월 19일에 함남도지사와 함남경찰부장이 새로 발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원산부윤과 원산경찰서장이 경질되었던 것⁷⁾은 노련 타도

5) 매일신보 1929년 2월 7일자 사설(조선총독부 경무국, 『元山勞働爭議に關する新聞の論調』(이하 『논조』로 약칭), 1930년, 142~4면에서 재인용).

6)金森, 앞의 글의 (1), 49~50면.

7)김중렬, 앞의 책, 126면 및金森, 앞의 글의 (1), 9면, 함흥헌병대, 『元山勞働

를 위한 총독부의 새로운 포석이었으며 이는 일제와의 결탁에 의한 자본가 측에서의 계획이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상의가 “결기하여 각 관헌의 양해를 구하여 응전하기로” 하자 일본인이 발행하는 원산매일이나 함남시사신보의 성원과 국수회(國粹會)·의협단·청년단·자위단 등의 일본인 민간단체에서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가장하였지만 사실은 쟁의 당초부터 기독교 계통의 것을 포함한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였으며 삐라나 포스터 등은 출판법 위반으로 배포나 게시가 금지되었다.⁸⁾ 또한 경찰은 비상경비태세로 들어가 의협단이나 소방대원, 재향군인 등을 동원하여 시내 요소소소에 배치하였으며 영흥과 고원, 안변 등지에서의 응원경찰관들이 총끝에 칼을 꽂고 골목마다 삼엄한 경계를 유지하였다. 주목할 것은 총파업에 군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양상과는 다른 것으로서 30년 이후 파시즘적 식민 통치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총파업 직후인 24일에는 일본군 제19사단 함흥보병대 73, 74연대 300명과 400명의 재향군인 및 1천명의 소방대원이 “창검과 철포로 무장”을 하고 시가를 행진하여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7일 밤에는 노련이 경영하는 노동병원 간부가 실종되는 등 “노련측 주요인물 거처 불명자가 속출”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헌병대 영창에 구금되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⁹⁾ 원산 헌병대는 총파업의 경과와 과정을 동경과 조선의 각 주둔군 사령관에게 세밀히 보고하였으며 노련에 대한 수사와 검거 등 쟁의의 전과정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였다.¹⁰⁾ 뿐만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장래는 쟁의에 대한 취체법을 판단하건대 헌병은 상황의 시찰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극력 지방관헌과 연락하여 선처할 적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대국에 착안하여 서로 단결하여 취체”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서 “또 소요 발발 등에 대하여 보조헌병을 출동시키는 경우는 사태가 용이하지 않은 시기이므로 출동한 이상 철저한 탄압을 요하므로 그 병력은 상당한 인원을 요한다”고 하여 개입의 의지와 폭력적 탄압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30년대 이후 비합법운동의 영역에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한 가운

『爭議ノ顛末』, 1929년 5월, 朝威 第1353號(이하 『전말』로 약칭).

8) 小林, 앞의 글, 40~1면.

9) 동아일보 1929년 1월 30일, 2월 1일, 10일 및 11일자. 또한 강동진, 앞의 글, 249~51면 참조.

10) 함흥헌병대, 『元山ノ勞働爭議ト民族的關係ノ一考察』, 1929년 4월, 朝威 第411號(이하 『고찰』로 약칭)와 『元山勞働爭議ノ概況』(이하 『개황』으로 약칭) 및 『전말』.

데 특히 함경남북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민족해방투쟁에 대하여 일제가 헌병과 군대를 동원하여 가혹한 탄압을 하였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과 권력의 이러한 적극적 공세에 대하여 방어적 입장에서 있던 노련은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지구전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노련은 소속 노동자의 폭동을 경계하면서 규찰대를 조직하여 자본가측의 노동자 모집을 저지하고 자체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였다. 또한 자본가측의 역선전에 대항하여 수차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파업자금이 각지로부터 속속 담지하였으며 격전과 격문이 빗발처럼 날아들었다. 전국 각지의 노동조합이나 노동연맹으로부터 위문원과 조사원이 속속 원산에 도착하였다. 노련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던 운송부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직공부에서는 1월 27일에 양복기공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어서 인쇄노동자와 점수레노동자가 이에 호응하였다. 2월 1일에는 임시로 부두작업에 종사하던 일본인들까지 총파업에 동조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 심지어 원산 시내의 한산(閑散) 노동자들까지 자본의 고용의 유혹을 물리치고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새로이 자유노동조합을 조직하여 노련에 가맹함과 동시에 동정파업을 단행하였다.

이와같이 파업단의 활동이 절정에 달하고 노동자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 국면에서 일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 1월 29일에 “경찰은 흡사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자측의 약점을 잡기에 고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파업지속의 원동력인 소비조합과 그 자금”¹¹⁾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부를 압수하였으며 2월 2일의 새벽에는 노련의 각 세포조합의 수색과 함께 일체의 문서를 압수하였다. 규찰대원은 폭행과 협박의 혐의가 씌워져 속속 검거되었으며 노련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¹²⁾ 2월 9일에는 진상조사차 원산에 와 있던 변호사 김태영(金泰榮)이 위원장 대리로 취임하면서 노련은 피검된 간부를 보충하여 진용을 정비하여 투쟁을 계속하였으나 형세는 이미 노련에 불리하였다.

검속이 확대되면서 국면은 급속히 변화하여 자본가측은 공격의 예봉을 더

11) 동아일보 1929년 1월 31일자 사설(『논조』, 141면에서 재인용).

12) 2월 7일까지 위원장 이하 20여명이 수감되었으며 검거된 인원은 20일까지 37명, 2월말까지는 42명에 이르렀다. 이철악, 앞의 글, 366면, 강동진, 앞의 글, 253면 및 중외일보 1929년 2월 20일자 참조.

욱 날카롭게 하였다. 파업의 시작과 함께 자본가들은 즉각 인부 모집에 착수하였으나 원산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자도 모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인천으로부터 부근의 농민과 한산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데는 부분적으로 성공하지만 가혹한 대우와 극심한 억압 등으로 도망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1월 28일에는 비밀리에 고용주들이 회합하여 노련에 대항하는 새로운 노동단체를 조직하여 노동자를 유인,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자금은 국제통운과 국제운수에서 제공하기로 내정하였다.¹³⁾ 2월 6일에 상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련의 박멸을 선언하고 어용노조의 구상을 밝혔으며 19일에는 각 고용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남노동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¹⁴⁾ 24일에는 어용노조가 나타났으며 다음날 상의는 이의 설립을 알리는 뼈라를 대대적으로 살포하였다. 농한기에 농촌을 떠난 자유노동자들이 주로 이에 응하였으며 그 숫자는 3월 2일까지 400여명에 달하였다. 어느정도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상의는 5일에 인천노동자전부를 인천으로 송환하였다.

이처럼 자본과 권력의 억압의 고삐가 바짝 죄어드는 가운데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일제는 노련에 대한 수색과 압수를 재차 단행하는 한편 2월 17일부터는 300여명의 경관을 동원하여 2천여 노련회원의 가정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식량과 가옥상태 등을 엄밀하게 조사하였다. 이는 파업단의 투쟁역량의 강도를 분석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위협과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적 행위였다. 또한 강령과 마크가 붙은하다는 등의 이유로 온건한 합법적 쟁의를 공산주의 운동으로 몰아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였다. 2월말에는 3·1절 특별경계를 이유로 “원산 시내를 철통과 같이 포위경계중이어서 … 담총순사(擔銃巡査) 100여명이 전시가를 행진하여 비상경계를 하는 동시에 일대 시위운동을 하여 공기는 극도로 긴장”¹⁵⁾ 되었다. 이와 함께 함남지사는 총독부에서 고위 관리들과 밀의를 거듭하여 노련에 대한 모종의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적이

13) 어용노조는 그 이전에 이미 상의와 총독부의 사전 협의에서 구상, 결정되었다고 한다. 김중렬, 앞의 책, 128면 및 141면. 또한 중외일보 1929년 2월 10일자 참조.

14) 어용노조의 준비결성일이 21일이라고 하나 이는 보도일자이다. 김중렬, 앞의 책, 156~7면 및 『논조』, 85면.

15) 중외일보 1929년 3월 5일자.

고 공포적인 분위기는 일제가 노련을 협박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서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온건하고 질서정연한 합법적 노동운동에 대한 상의의 적극적 개입이나 경찰의 탄압 등은 일반 여론의 많은 비판과 불만을 야기하였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노련은 “세계 사조를 이해하는 일반사회와 여론적 지지와 성원”¹⁶⁾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인식 없이 “원산 사건 단호처치설” “원산 대쟁의 총본영 연합회 해산명령설, 총독부 수뇌부 밀의” “작금의 경계는 최후처단의 전제시위”¹⁷⁾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총독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노련의 지도부는 3월 7일에 강령과 마크를 개정함과 동시에 간부의 총교체를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의 통일과 무산자의 세계적 제휴를 도모하며 무산계급의 해방을 기한다”는 강령은 “생활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수양을 본위로” 하는 노자협조주의적인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노련의 신간부는 함남지사나 경찰부장 등에게 원만한 해결을 탄원하는 한편 지사나 원산부윤 등의 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굴욕적이고 비주체적인 자세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의 내부에 분열이 발생하여 국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상의와 보조를 같이해온 조선인 자본가들은 더이상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하여 노련의 요구조건을 승인하고 노동자들의 복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3월 21일에 인흥운송점에서 단독으로 노련의 요구사항을 인정하고 쟁의를 해결하자 몇몇 조선인 자본가들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조선인 운송업자가 수적으로 반수 이상을 점하는 원산 운송조합은 분열의 징조가 농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노련은 긴급위원회를 열어 고주(雇主)가 조선인인 객주조합과 각 상회, 상점의 운반조(運搬組)와 결복조원(結卜組員) 240명 전원에게 25일부터 복업하도록 명령을 내렸다.¹⁸⁾

16) 조선일보 1929년 1월 21일자 및 『논조』, 44면. 이에 대한 단적인 예를 들자면 심지어 총독부 식산국에서조차 총파업을 “질서정연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상의의 “본분 이상의 무모한 행동”을 비난할 정도였다. 동아일보 1929년 2월 6일자 참조.

17) 각각 조선일보 1931년 3월 1일, 중외일보 3월 2일 및 3일자.

18) 조선일보 1929년 3월 26일자. 여기서는 운송조합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운반조의 착오이다. 이들은 노련의 20여 세포단체 중 조선인이 고주인 경우이다. 『논조』, 20~9면 참조.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일제하의 연구나 해방이후 북한과 일본의 연구들에서는 정확하게 지적되고 있는데 남한에서의 연구들은 모두 이를 자본과 일제의 공세가 관철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자본가진영 내부에서의 “심각한 모순과 갈등의 폭발로서 고주동맹 붕괴의 시초이며 파업승리의 서광”이므로 노련측에 유리한 사태의 진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파업단의 보조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계기”¹⁹⁾로서 노련측의 패배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탈”은 노련에서의 이탈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진영에서의 이탈이었던 것이며 기본적으로 이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에서 기인하는 사실에 대한 왜곡과 오해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잘못 해석, 이해되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총파업의 마지막 부분인 이른바 폭력화의 단계이다. 사건의 대체적인 경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련측의 패색이 점차 짙어가는 가운데 조선인 자본가가 상의에서 이탈하여 사태의 진전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와중에서 4월 1일 오후 5시경에 돌연 노동자 10여명이 곤봉과 돌을 들고 함남노동회를 습격하여 전화를 끊고 회의 간판을 떼어버린 후 사무실로 돌입하여 간부와 회원을 닥치는대로 난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슷한 시간에 해안통과 어시장 부근에서도 노동자들의 충돌이 있었으며 함남노동회 이사의 집 또한 습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수십명의 부상자가 나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으며 “습격 군중은 삼시간에 바람결같이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2일과 3일의 오전 5시에는 노동자 수십명이 출근하는 함남노동회원들을 난타하여 수명의 경상자를 내고 자취를 감추었다. 3일 오전 2시경에는 10여명의 노동자가 함남노동회 간부의 집을 또 습격하였으나 “현장에서는 1인도 체포하지 못하였다.”²⁰⁾ 총파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글들은 이를 의심할 여지 없는 노련측의 행위로 단정하고 있다. 즉 “노련측에서는 우발적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조직적·계획적 행동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서 이는 최후의 책전(策戰)으로서 이것에 의해 함남노동회측을 위포휴업(威怖休業)시켜 국면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라든지 혹은 정반대의 입장에서 “노동자대중의 격분은 극도에 달하여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라거나 혹은 “4월 1일부터

19) 윤형빈, 앞의 글, 44면 및 강동진, 앞의 글, 255면.

20) 이상의 경과에 관하여는 조선일보 1929년 4월 3일 및 동아일보 같은 일자와 4월 4일자 참조.

감행한 혈투 등은 상상을 초월한 감투정신”이라는 것²¹⁾ 등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의 흐름 안에서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건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4월 1일부터의 일련의 습격사건은 자본과 일제의 공모에 의한 음모라고 판단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인 자본가가 상의에서 이탈하여 독자적 행동을 취하면서 노련측의 요구를 전면수용함으로써 조성된 국면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노련의 완전한 박멸과 어용노조로의 재편을 의도하였던 일제와 자본가들을 매우 당혹케 하였다. 그로써 매우 교묘하고 간교한 전략이 채택되었다. 일부 조선인 자본가들의 이탈로 전열이 동요되는 가운데 노련의 복업명령이 내려진 직후에 원산부윤이 조정에 나선다. 지금까지 부윤은 노련의 지도부나 시민협회 등에서 누차 조정을 권유받았으나 전세가 자본가측에 유리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나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의 국면변화로 낭패에 빠진 자본을 돕기 위하여 몸소 부윤이 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 한편의 극에서 그가 맡은 배역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시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 자본가들에 대하여 사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먼저 이전의 소극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그가 조정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²²⁾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조정안이란 노련의 개량주의적 지도부에서조차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조정이란 교섭과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는 단지 조정안만을 제시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았다. 이로 미루어보건대 그는 실질적인 조정의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조정의 명분을 얻기 위한 배역을 맡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리하여 일단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명분을 얻은 부윤은 27일에 상의의 평의회회 석상에서 노련측의 강경한 태도로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이후에는 일체 조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한 조선인 평의원의 통론(痛論)에 귀를 기울여보기로 하자.

부윤이 이제 와서 조정을 아니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안다. 당시 시민협회가 조정에 출마하여 부윤과 알선을 하여 달라고 말한 일이 있

21) 각기 『논조』, 119~20면, 이철악, 앞의 글, 349면 및 김종렬, 166면 참조.

22) 조선일보 1929년 3월 29일자.

을 때에 부윤의 말은 시기상조이니 출마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제 ... 와서 조정을 하여본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하는 것처럼 한 것이니 이는 너무나 부민을 무시하는 것이다.²³⁾

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9일에는 상의에서 원산의 모든 하주(荷主)들을 소집하여 하주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인 하주 20명과 일본인 하주 40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상의의 회두(會頭, 회장)는 총파업의 원인과 경과 및 함남노동회의 출생전말을 보고한 후 이것으로 상의는 표면적으로 쟁의와 관계를 끊는다고 언명하였다. 이 회의의 주요한 목적은 두 가지였다. 즉 첫째로는 상의가 총파업에 더이상 관여를 않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 및 두번째로는 노련에 대한 관헌의 조치를 암시하면서 일체의 노련회원을 쓰지 말 것, 즉 노련의 단체계약권과 같은 “악법을 긍정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동요하는 조선인 자본가들에게 쟁기를 박아두려는 것이었다. 모종의 조치가 암시되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은 이를 보고나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이나 위협의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처럼 서둘러 무대에서 퇴장함으로써 일제와 자본은 앞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태에 대한 혐의나 책임으로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하였다. 회의가 있는 지 이틀 후에 이른바 노동자들에 의한 습격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확증할 수 있는 몇몇 사실들을 첨가하기로 하자.

먼저 노련이 당시 전국적으로 규율과 질서의 측면에서 정평있는 노동단체였으며 총독부에서조차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당시 노동쟁의의 상당수는 폭력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었으며²⁴⁾ 따라서 연구자들은 노동자들에 의한 폭력화를 의심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의 강압적이고 가혹한 탄압이 가해지는 경우에 취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노련과 같이 10여년의 오랜 시기에 걸쳐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해온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파업의 시작부터 노련은 폭동을 자진 경계하였으며 이에 관한 주의서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초기

23) 중의일보 1929년 3월 30일자.

24) 김경일, 「일제하 고무노동자의 상태와 노동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 『일제하의 사회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9집, 문학파지성사, 1987, 121면 참조.

에 폭동을 유도하려던 자본가들의 전략은 노동자들의 규율과 질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러한 “단결과 계급의식”이 3개월여에 걸쳐 “자본과 정치적 배경”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자본측이 모집해온 인천이나 원산 부근의 한산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노련은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부의 결속을 굳게 하였으며 파업의 중반부인 3월말에도 노련은 “우리에게 단결이 있을 뿐”²⁵⁾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더우기 당시에는 조선인 자본가들의 이탈로 자본가 진영이 동요되고 있었던 시기이므로 노동자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하등의 전술적 이유가 없었다. 습격 직후에 노련간부가 아연실색하여 사건의 발생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것²⁶⁾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습격이 10~20여명의 규모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이 1인도 없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당시 원산은 비상경제에 의해 경비가 삼엄하였으며 더구나 첫 습격이 있었던 4월 1일 이후에는 “무장경관 수백명이 총동원되어 완전한 계엄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습격이 감행되었으며 “습격군중은 삼시간에 바람결같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것이다. 무장폭동의 경우에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관계인원 대다수가 검거되는 것이 일제하 치안상의 통례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는 매우 예외적이며 드문 현상이었다. 이처럼 삼엄한 경제하에서, 예상될 수 있는 비교적 대규모의 조직적인 행동이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으며 더구나 현장에서 1인도 검거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치안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시의 신문기사를 면밀히 검토해보아도 습격자가 노련측이라고 확증된 기사는 하나도 없다. 단지 “군중”이나 “노동자”라고만 지칭될 따름이며 노련측 노동자가 구속되는 등의 정황에 의해 노련측일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을 따름이다.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람도 모두 “폭행협의자”로 보도되어 진정한 범인은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경찰이 혐의자로 검거한 대부분이 조선인 자본가의 양보에 따라 복역한 운반조와 결복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²⁷⁾이다. 노련이 패배한 이후인 4월 17일에 이들 조합은 결국 해체되어버리는데 이를 통해 일제가 노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25) 조선일보 1929년 3월 31일자.

26)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

27) 동아일보 1929년 4월 4일자 및 『논조』, 121~2면.

인 사실은 일제가 이른바 혐의자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던 노동자들이 그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음해인 2월에 함흥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 18명의 대부분은 모두 고문에 못이겨 대답을 한 것이지 자신들은 현장에 간 일조차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되어 있는 2인조차도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폭행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 함남노동회 소속 노동자들을 권고, 위협하였다는 정도의 것으로 이는 4월이 아닌 3월 28일의 사건²⁸⁾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하여 항소하는데 6월의 경성 복심법원에서 어쨌든 사실을 시인한 위의 2인이 징역 3년을 언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는다.²⁹⁾

마지막으로 일제와 자본이 꾸민 최후의 무대로 시선을 옮겨보기로 하자. 습격과 이를 명분으로 한 무차별한 검거로 조성된 공포분위기를 이용하여 자본가계급은 노련의 항복문서를 조속히 받아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자신들의 음모가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산경찰서장이 등장한다. 그는 이전에 부윤의 조정안에서 노련측이 차마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함남노동회를 통한 노련회원의 사용” 등의 조건을 자본가측에서 철회하기로 양해하였다는 사실을 노련측에 통고하여왔다. 공포에 질리고 당황한 노련측은 이로써 복합할 명분을 얻게 되었으며 4월 6일 전체 집행위원 30여명 중 겨우 11명이 참석하여 성원도 되지 않은 집행위원회에서 서둘러 각 세포단체에 자유복업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이 각 세포단체에서 제기되는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노련은 전체 대의원회를 열어 이 결정을 추진받음으로써 기층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함남노동회의 가입을 거절하고 각 세포단체가 자유로 분산취업하기로 결의한다. 그러나 국제운수와 국제통운을 비롯하여 조선인 객주조합까지 포함한 자본가 진영에서는 새 노동회를 경유하지 아니하면 고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같이 원산의 고주회가 노련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겠다는 의견서를 발표하자, 이에 호응하여 총독부에서는 “한 지방에 2개의 노동단체를 만든 것을 묻기 전에

28) 조선일보 1929년 3월 31일자.

29)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법상의 폭력으로 일제의 잔학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중외일보 1929년 2월 25일자, 5월 27일자, 동아일보 2월 28일자와 3월 10일자 및 조선일보 6월 3일자 참조.

노련에서 노동자 각자가 탈퇴하는 것이 가장 상책일 것이며 또한 양 단체의 자유경쟁은 노동을 팔기 위하여 피치못할 일인즉 절대 불간섭주의”³⁰⁾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원산세관에서는 노련 소속의 노동자가 문감(門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절하였다. 10일에는 상의 내에 있는 원산쟁의위원회가 함남경찰부장과 원산부윤, 경찰서장의 입회하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노련의 복업명령에 대하여 원산서에서 양해하였다는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하주측에서는 새 노동회를 경과하지 않은 인부는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서장의 알선은 “이제 와서 온전히 허언”³¹⁾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곧이어 11일에 열린 조선인 객주조합 평의회에서 상의의 회두는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함남노동회에 가입해야 채용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여³²⁾ 조선인 자본가들을 단속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이로써 노련 소속 노동자들의 일부(약 400명)는 부득이 노련에서 탈퇴하여 함남노동회에 가입하거나 혹은 전업하였으며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4월 21일에는 노련의 사무실과 소비조합이 폐쇄되고 이리하여 총파업은 결국 노련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이와같이 객관적 사실들과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4월 1일 이후의 노동자들의 습격은 노련 소속 노동자들에 의한 것이었다는 지금까지의 통설은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인 자본가의 동요로 노련의 완전한 박멸이 불가능한 시점에서 일제와 자본의 결탁과 공모에 의해 치밀한 각본과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자행된 음모이다. 폭력사태 이후 원산에는 “수색과 검거의 선풍”이 불어닥치고 무장경관과 기마헌병이 중파되는 한편 닥치는대로 검거하는 “살풍경이 속출”하면서 “일반시민은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빠지며 노약과 부녀들의 전전공공하는 모양은 마치 전시상태와 흡사”³³⁾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공포는 일제가 경계와 검거를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이러한 폭력적 분위기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을 암묵적으로 위협하여 이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30) 조선일보 1929년 4월 11일자.

31) 조선일보 1929년 4월 12일자.

32)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자.

33) 동아일보 1929년 4월 5일자.

3. 민족해방투쟁과 노동계급

총파업에 관한 해방이후 국내에서의 연구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총파업이 노동자들에 의한 민족해방투쟁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하는 점일 것이다. 즉 식민지에서의 노동운동은 그 자체가 민족해방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민족항쟁”이나 “항일투쟁사”라고 하여 주로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총파업을 오직 일본인 자본가계급과 일제에 대한 투쟁으로서만 간주하여 식민지에서 민족부르조아지와 민족개량주의의 문제를 사상해버리고 식민지 민중 대 제국주의 사이의 대립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경계하면서 계급적 시각에서 총파업을 파악하는 글로서는 해방 이전의 김영두, 이철악 및 북한과 일본에서의 코바야시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이에서도 노동계급의 주도권과 민족부르조아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 민중 내부에서의 각 계급들의 편성과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인식에서 한결 진전된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장에서는 특히 민족부르조아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총파업의 전과정에서 각각의 사회계급들의 진영이 어떻게 편성되며 또 그것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지니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자본가 및 관헌의 갖가지 계략이나 관헌 및 일본인측이 쟁의를 이용하여 제국주의 반대의 조선인 및 노동운동 박멸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던 사실”³⁴⁾에 관하여는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다. 결코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들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은 시초부터 명확히 민족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27년 6월의 파업에서 내부 분열로 패배를 경험한 바 있었던 자본가 진영에서는 쟁의의 최초부터 조선인 중소자본가들을 배제시켰다. 총파업과 관련된 상의의 임원이나 쟁의위원회에는 절대로 조선인을 가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 임원이나 각 운송업자, 회조업자(回漕業者, 해상운송업자) 및 하주 등은 이미 총파업에 대한 대응이 민족적 의식하에서 행해지고 있다

34) 『일본사회운동통신』 제 47 호, 1929년 4월 22일(小林, 앞의 글, 39면에서 재인용).

는 생각을 파업의 당초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와 아울러 원산경찰서의 조선인 간부가 헌병대의 압력에 의해 교체되었으며 시가지의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의한 폭동의 발발을 우려하여 자경단을 조직하여 야경에 들어갔다.³⁵⁾

막강한 자금력과 단결력을 배경으로 한 노련에 대한 도전이었었던만큼 자본가 진영에서는 파업이 장기적으로 지구전화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총파업으로 원산항에 하물의 유입이 끊기게 되고 일반 상거래가 중지되면서 은행 등에서의 업무가 중단되자 증소자본과 대자본 사이에서 이해의 충돌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자본의 이러한 구분은 동시에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표지와 어느정도 겹치는 것이었다. 자본가 진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제운수와 국제통운을 비롯한 대자본의 일부 회사나 상점의 처지와는 대조적으로 증소자본가들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자가 속출하는 등 대단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1월 31일에는 몇명의 조선인 미곡상조합 대표들이 원산서를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포목·잡화, 고무상 등 일반 소매상점의 인심이 흉흉한 가운데 2월 1일에는 곡물상·양화상 등 각 방면에서 상의에 대한 문책 경고가 폭주하였으며 3일에는 조선인 잡화·음식점 등 36명이 연서로 경찰서에 진정하였다.³⁶⁾ 이러한 대립은 상의 내에서도 나타났다. 조선인 증소자본가들은 상의가 조정에 나서기로 하고 노련에 대하여 운송업조합과 회조업조합의 절연장을 보낸 것은 일반 조합원의 의견이 아니라 몇몇 간부들(즉 일본인 대자본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여 물의가 분분하였다. 이러한 불만은 곧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1월 30일에 상의의 조선인 부회두(副會頭)는 노련을 방문하여 “이번 쟁의에 대해 상의에서 저와 같은 태도를 취하나 나는 그 태도를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하여 조선인 시가인 원산리 방면의 복업을 간청하였다.³⁷⁾ 이와 아울러 조선인 무역상들로 조직된 객주조합에서는 원산시민협회의 알선으로 노련과의 조정방법까지 일임하여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

35) 『고찰』, 4~5면 및 『전말』.

36) 동아일보 1929년 2월 3일자. 『논조』, 13면 및 106~7면 또한 김종렬, 앞의 책, 143~5면.

37) 동아일보 1929년 1월 27일, 2월 4일자. 이철악, 앞의 글, 365면. 헌병대에서는 “원산객주조합원 수명이 노련을 방문하여… 조선인 관계의 하물만이라도 취급하여 달라고 간원한 사실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고찰』, 6면.

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시민협회는 원래 시민의 권리옹호를 표방하는 단체였는데 계급적으로는 원산의 민족부르조아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소상공업자들의 모임이었다. 총파업이 시작되자 곧이어 24일에 시민협회는 원산의 일만여 노동자의 사활문제라 하여 대책준비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다가 노련에 대한 경찰의 검거와 탄압이 더해지는 가운데 상의의 추격이 숨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2월 14일 이후에 노련과 객주조합의 회견을 앞선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정에 나서게 된다.

주목할 것은 총파업의 시초부터 이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이다. 상의가 인천으로부터 노동자를 모집하여 작업을 시작한 1월 26일 오후에 객주조합은 그것이 사용하는 중개조합이 이번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절연장을 보냈다. 조선인 자본가들은 일찌기 일본인 자본가 진영과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파업이 지구전으로 들어가면서 조선인 중소자본가들의 불평과 비난이 쏟아지게 되자 상의는 이에 대하여 협박과 회유 등의 수단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2월 14일 이후에 시민협회의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자 자본가 진영에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의는 객주조합과의 막후접촉과 더불어 각 고주들을 분주히 방문하는 한편 16일에는 시민협회와도 장시간 밀의를 하였다.³⁸⁾ 이 결과 상의는 17일에 객주조합으로부터 상의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공식적 결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이 결의에서 객주조합은 원산의 하주들이 원래 상의에 해결책을 위임했다는 것, 그리고 원산의 하물이 국제통운 등의 대자본가를 통하게 되므로 그에 의존하여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분해결은 무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⁹⁾ 시민협회의 조정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이 결의는 민족부르조아지 상층에 대한 회유와 하층에 대한 강압이라는 상의측 대응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민족부르조아지 내지 소부르조아지는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었다. 신문은 이를 “객주조합측 기로에 방황”⁴⁰⁾이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시민협회의 조정은 결렬되고 자본가측의 어용노조 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이들은 일제와의 동맹관계를 분명히 한다. 즉 22일에 객주조합은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상의가 계획하는 어용노조를 적극 원조하기로 하는 동시에 노련의 관계 세포단체인 운반조와 결복조에 대하여 신

38) 동아일보 1929년 2월 9일자.

39) 동아일보 1929년 2월 20일자 및 논조, 107~8면.

40) 동아일보 1929년 2월 21일자.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가입권고를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태도가 표변”한 객주조합은 운송업조합과 회조업조합, 곡물상조합 및 어상조합 등 자본가 진영과의 연합으로 새로 조직한 합남노동회에 속하지 않은 인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였다.⁴¹⁾ 여기에는 앞에서 상의의 독주를 비난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진정하던 조선인 중소자본가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그러나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던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1개월이 넘도록 파업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 보이자 3월 21일의 인흥운송점을 시발로 마침내 개별적으로 노련의 요구를 승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2장에서 살펴본 바 있었다. 이들이 노련의 복업을 요구한 중요한 이유는 합남노동회를 통하여 확보된 노동력의 대부분이 일본인 자본가에만 배당되고 조선인 자본가는 이로부터 배제되어 노동력 확보라는 문제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⁴²⁾ “객주조합 마침내 분열”⁴³⁾이라는 신문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자본가 진영의 동맹의 붕괴이면서 동시에 대자본 대 중소자본, 재계주의와 매판 대 민족자본 사이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결국 열제와 자본의 계약과 공모에 의한 습격사건 조작으로 조성된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들을 자본가 진영에 위협적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노련의 자유복업 결정이 내려진 4월 6일 이후에 이미 노련의 요구조건을 승인하여 취업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고용한 일반 하주와 상점들이 경찰의 금지나 객주조합과 어용노조의 항의 등에 의해 고용을 거절하는 가운데 10일에는 원산고주회 명의의 성명을 통하여, 이어서 11일에는 상의의 회두가 객주조합 평의회회 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노련 탈퇴와 신노동회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바 있었다. 이 조치에 대하여 조선인 단체로 너무 심하다는 일반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객주조합은 외면적으로는 오히려 일본인 자본가들보다도 더 강경한 태도를 고수⁴⁴⁾하였다.

이처럼 민족부르조아지는 그 계급에 고유한 속성인 우유부단한 기회주의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었다.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41) 동아일보 및 중외일보 1929년 2월 25일자.

42) 윤형빈, 앞의 글, 44면.

43) 중외일보 1929년 3월 28일자.

44) 조선일보 1929년 4월 13일자.

경우에는 쉽게 이탈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인천에서 노동자 모집에 성공한 다든지 혹은 신노동회의 순조로운 가동이 예상된다는지 하는 예에서와 같이 자본가 진영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면에서 이들은 계급적 동맹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동맹의 주도권은 민족부르조아지 상층에 있었으며 하층은 암묵적인 동조로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혁명운동에서 … 프롤레타리아의 조력자일 수 있었던 민족부르조아지가 공공연하게 동반자인 민중에게 등을 돌리고 스스로 선전포고”를 하였으며 “오늘날까지는 여하튼 이러한 운동에 참가하고 있던 소부르조아의 일부분이 이 쟁의를 계기로 프롤레타리아를 배반”했다는 평가⁴⁵⁾는 그 자체로서는 정당한 것이다. 총파업을 통하여 민족부르조아지는 정치적으로 민족개량주의적 입장을 명백히 드러낸 셈이며 이는 민족부르조아지와 일부 소부르조아지가 민족해방투쟁의 과정에서 그 진보적 성격을 잃고 대열에서 탈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경제투쟁과 정치투쟁

총파업에서 노련의 지도노선과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연구들은 의견을 달리하는 두 흐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번째의 입장은 총파업이 단순한 경제적 투쟁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투쟁의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주로 노동계급의 역량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노련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제하의 김영두와 이철악, 해방이후 북한에서의 연구 혹은 일본에서 코바야시의 연구 등이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자들의 반항은 경제적 불만을 넘어서 급속하게 정치적 반항으로까지 양양”되었으나 지도부의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적인 노선으로 “쟁의는 확실히 계급적 진로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아직 개량주의의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총파업은 “부분적으로 경제투쟁이었지만 반제투쟁의 성격과 요구조건의 적극성, 운동의 추진력 및 당시의 정세 등에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련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단순한 경제투쟁이라기보다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이 결합되어 있었던 반제투

45) 이철악, 앞의 글, 348~50면.

쟁”이었다고 하면서 반면에 “지도부의 다수를 점하는 개량주의자는 합법투쟁만에 의해” 조정과 타협으로 일관하여 “노동계급의 투쟁력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결정적 진출을 저해”⁴⁶⁾하였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의 견해는 총파업의 발단이 일본인 감독의 민족적 차별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요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니는 조합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성격을 부각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이 온건하고 질서정연한 합법적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지도부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 하여 이에 대한 평가는 앞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이 입장은 총파업을 “한국근대사상 가장 큰 민족투쟁” 혹은 “완전한 민족항쟁”⁴⁷⁾으로만 파악하는 해방이후 남한에서의 연구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전후 일본에서의 카나모리도 “조합간부와 회원은 결코 유리(遊離)하였던 것이 아니며 … 선진적 조합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경식 등 간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⁴⁸⁾이라 하여 이와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후자의 이러한 평가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총파업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둔다면 전자의 입장에서든 결과적으로 그러한 양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발행하는 신문 기사에서 노련이 “순조합주의적 운동만을 하며 조선내의 각종 운동단체와 같은 정치운동을 절대로 배격하는 단체”라고 한 것이나 함흥 헌병대가 자체 조사를 통하여 “조선내의 노동단체에서 선동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은 없으며” “노농 러시아에서도 아직 사주받은 것과 같은 형적은 없다”⁴⁹⁾고 한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나 조선 혹은 중외일보 등의 당시의 신문들을 보더라도 노련의 정치투쟁적 성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해방이후의 연구들이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기사를 주된 자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자본계급의 세계관 안에서 노동계급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사실의 제시와 그것의 평가에 중대한 오류와 왜곡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전자의 견해가 오히려 역사적 실체에 더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의 현병

46) 같은 글, 240면, 윤형빈, 앞의 글 및 小林, 앞의 글, 39면과 42~44면.

47) 강동진, 앞의 글, 240면 및 김중렬, 앞의 책, 124면.

48) 金森, 앞의 글의 (1), 23면.

49) 각각 『논조』, 8면 및 『개황』 참조.

대 조사에서는 끝이어 노련이 결국은 “전조선 노동계의 통일을 목표로 하여 … 그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점차 정치적 운동을 획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제하의 사회주의자들은 당시의 신문들이 부르조아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당시의 조선일보 원산지국장은 그 자신이 객주조합에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파업이 발생한 이래 노련에 유리한 기사 원고는 일체 송고하지 않았던 것⁵⁰⁾이다. 그러나 전자의 평가도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도식적이고 이상적인 평가와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는 어느정도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노련의 지도노선과 노동자들의 투쟁방향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는 노련의 발생에서부터 총파업의 패배 이후의 경로까지를 포함한 지속적인 흐름을 총체적으로 살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노련의 모체가 된 원산노동회가 설립된 것은 21년 3월 15일이었다. 부산 노동자의 경제해방과 지식의 향상을 목적으로 내걸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회는 3·1운동 이후 증대되고 있었던 사회주의의 영향 아래 설립된 것이었다. 즉 20년 2월에 경성에서 김광제(金光濟) 등에 의해 노동대회가 조직되고 이후 각지에 지부가 설립되었는데 원산에서도 7월에 지부가 설치되어 이것이 노동회로 발전된 것이었다. 원산부두를 중심으로 하물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초기의 회원수는 800명에서 1천여명이었다고 하며 이후 노동자의 상호부조와 계급적 훈련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다른 한편 노동회는 그 기원을 봉건적인 것에 둔 자연발생적인 조직에서 기원한 것이었다. 개항기의 항만에서 부두노동자의 고용과 감독이 관의 간섭 아래 이루어지던 시대를 배경으로 부두노동에서는 봉건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온정주의적인 노동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 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노동공급권을 배타적으로 확보한 십장은 노동권의 제공과 생계의 보장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임금의 일정한 몫을 착취하는 등 권위와 위계로써 군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초기 부두노동자의 조직은 의형제 혹은 만동생(萬同生) 등의 자연발생적이고 원시적인 형태로 결합되었다가 점차로 근대적 형태에 가까운 노계(勞契) 혹은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결성은 1898년 성진에서 부두노동자들에 의한 것이 최초라고 하지만⁵¹⁾ 부산이나 인천·원산·청진·군산·진

50) 『고찰』, 8면.

51) 이규창, 『한국항만하역노무론』, 일조각, 1974, 88~97면 및 113~7면 참조.

남포 등 초기의 개항장으로서 이후 식민지의 교역의 통로가 되었던 곳에서는 이미 이전에 유형무형의 각종 조직이 십장 등의 지배 아래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20년대의 들어와서도 이러한 반 봉건적이고 온정주의적인 노동관계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20년대에 사회주의의 보급과 노동운동의 발전은 여기에 얼마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원산과 목포 등에서 일정한 시기를 제외한다면 봉건성과 제국주의적 지배가 결부되어 온정주의의 파괴와 더불어 식민지적 착취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원산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은 사회주의의 영향 등으로 이른 편이었고 또 이것의 성장과 더불어 식민적 지배와 착취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이후의 대체적인 경과이지만 20년대초만 하더라도 이러한 온정주의는 원산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으며 노동회의 설립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노동회는 1910년경에 조직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도중(都中)을 기본적 단위로 하여 조직되어 있었다. 도중이란 한 십장 밑에 포섭되어 일정한 구역의 일을 객주(즉 고용주)별로 맡아서 행하는 단위로서 조 또는 반이라고도 하였는데 노련의 세포단체가 바로 이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회는 객주조합의 강한 영향력에서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객주조합은 노동대회 원산지회를 해산시킬 정도의 세력을 국지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회도 객주조합의 감독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⁵²⁾ 초기의 실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노동회는 진보와 보수, 과거가 미래가 혼효된 양면성을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노동계급의 자기의식과 투쟁역량의 성숙에 따라 보수와 과거는 점차로 퇴색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기반은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었으며 개량주의의 중요한 원천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노동회는 설립 이후에 상호부조와 공제활동, 조직적 규율과 계급의식의 고양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설립된 이듬해인 22년에는 곡물부와 잡화부가 있는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이해 말에는 노동이발부를 직영한다. 23년에는 노동자를 위한 간이식당을 개설하였으며 회원의 질병과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규약저금을 시행한다. 24년 6월에는 회의 규약중에 “일치단결로써 노동운동에 헌신한다”는 조항을 첨가하는 한편 (1) 노동계급의 해방 (2) 무산계급의 세계적 제휴 (3) 노동자의 지식향상 (4) 노동자의

52) 동아일보 1921년 3월 18일자.

생활향상 등으로 요약되는 새 강령을 채택한다. 이와 아울러 노동자의 의식화와 전위군의 양성을 위해서 강습소나 노동야학 등을 연중행사로 개강하였으며 계급의식의 촉진과 훈련을 위해서 신문잡지를 편찬 발행하거나 순회강연과 강담회 등을 수시로 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많은 파업을 조직, 전개하여 계급의식과 단결의 힘이 더욱 증대되어갔다. 25년 1월에 객주조합에 대한 임금인상 요구 파업을 승리로 이끈 노동회에서 창립시에 체결한 객주조합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약정서의 조항이 노동회의 수처리 하여 폐기를 선언하는 것⁵³⁾은 이러한 고양과 증대의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서 25년 11월의 추기 총회에서는 조직을 변경하여 각 세포단체인 40여개의 도중을 직업과 장소에 따라 통합하여 결북·운반·부두·운송 등 7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회는 노동연합회로 개칭되었으며 종래의 이사제는 집행위원제로 변경되었다. 연합회 조직으로의 이러한 재편은 당시 전국의 노동운동에서의 일반적 발전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⁵⁴⁾ 이후 인쇄·목공·양화·이발·양복·점수레노조 등의 직업적 부문까지 포괄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연합체로서 발전해나가게 된다. 그 규모는 해륙운수노동자들에 의한 운송부 약 1,800여명과 직업적 노조의 직공부 약 400여명을 합한 2,200여명으로서 이는 원산의 노동자들을 거의 다 포괄한 숫자라고 한다. 이후 노련은 노동자의 일상적인 이익획득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교양과 계급의식을 증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련은 무려 20여회의 파업을 지도하여 승리로 이끌었으며 이와 함께 26년 12월에는 지정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듬해에는 당시의 노동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노동병원을 직영하였다. 각 세포단체에는 구제부를 두어 혼인이나 사망 혹은 질병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였으며 그 비용은 회원의 가입금과 임금에서의 일정한 공제액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노련은 노동단체로서 정치적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즉 25년 4월의 추기 총회에서는 당시 화요계의 주도에 의해 개최 준비중이던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적극 반대하기로 하였으며 노련 재편 직후인 25년 11월에는 동북노동연맹을 주동적으로 받기하여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에 산재한 노동단체의 지역적 통합에 노력하였다. 이

53) 동아일보 1925년 2월 18일자. 또한 『논조』, 23면 참조.

54) 지역적 노동연합체로서는 순천, 평양, 군산, 서울, 진주, 목포 등에 이어 일찌기 결성되었던 것이다.

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북풍·화요계와 서울청년회계와의 대립·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노련은 원산의 사상단체인 사회과학연구회나 청년전위단체인 원산노동청년회와의 밀접한 제휴 아래 장기욱(張基郁)·이계심(李啓心)·김대욱(金大郁)·안몽룡(安夢龍)·한명찬(韓明燦)·박태선(朴泰善) 등 서울청년회계의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의해 정치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26년 이후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운동전선의 통일과 『파벌주의 박멸이 도처에서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다. 이에 대한 원산의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호응⁵⁵⁾을 배경으로 노련은 이 시기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한다. 27년 2월에는 노련을 비롯한 위의 3단체의 주도에 의해 원산사회단체협의회를 개최하여 파벌을 타파하고 민족적 단일전선을 지지하며 운동의 통일기관을 축성할 것 등의 운동방침을 결정⁵⁶⁾하였다. 한달 후인 3월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각 부문 운동의 통일 또는 조직축성을 협의할 목적으로 노련을 비롯한 각 부문위원 20여명이 모여 원산사회운동협의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이와같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앞에 언급한 27년 6월의 총파업이 있게 된다.

이후 10월에 원산노동청년회 등 4개 단체가 해체하여 원산청년동맹으로 조직이 통일되어나가는 가운데 28년 1월에 노련은 지방적 운동을 전국적·세계적 노동자와의 제휴로 확대하고 협동전선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간회와 적극 제휴한다는 결의를 채택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혁명을 성원하고 노농러시아를 모방하는 마르크를 제정하며 회관에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을 걸어 놓는다. 또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8시간 노동제를 확립하라” “농민과 굳게 손을 잡으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는 등 정치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슬로건들을 내세우게 된다.⁵⁷⁾ 특히 이 시기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연대가 주창되고 의식의 전반적 고양에 있었던 단계이다. 노동계급의 단결과 규율은 더욱 강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세계적 연대에 대한 비전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 자신들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크게 고무되었다. 28년의 메이데이에서는 “42개 가맹단체

55) 이들 대다수는 이른바 서울청년회의 신파에 속한다.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 공산주의운동사 (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243면 및 『논조』, 22면 참조.

56) 동아일보 1927년 2월 25일자.

57) 『논조』, 22면, 윤형빈, 앞의 글, 34면 및 『개황』 참조.

의 2천여명이 … 노동자의 대지로 화한 … 장엄을 표시”하였으며 이어서 며칠 후에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는 “낮과 마치를 교차한 각 조합기를 높이 들고 무산대중만세를 부르고 해가 저물도록 시내로 행렬을 하였다는데 당일은 자못 원산 시내가 담적색(淡赤色, 적색은 금지) 수포(手布)를 쓴 노동자의 빛”으로 가득하였다.⁵⁸⁾ 이어서 28년 6월에는 청년노동자의 교양과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부를 신설하여 미신타파와 문맹퇴치, 강좌개최 등을 계획하였으며 이외에도 회보를 발행하고 부인강연회나 정기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조되고 있었던 이러한 분위기는 28년 3월에서 7월에 걸쳐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이계삼·한명찬·장기옥 등 주요한 운동가들이 모두 검거⁵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의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온경주의적 속성을 지닌 조합내의 개량주의적 요소는 사회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련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다. 노련이 “거의 집행위원장의 독무대로서 동인(同人)의 전단(專斷)에 의해”⁶⁰⁾ 운영되었다고 보는 것도 이러한 점에서이다. 또한 정치적 투쟁을 지향하는 분위기의 고양에 결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28년 4월에 종전의 총회를 폐지하고 대의원회를 최고기관으로 하여 부담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등 노련이 일반 노동자의 자발성과 직접참여를 제한하고 경제투쟁의 양상을 강화하는 새 규칙을 제정한 것⁶¹⁾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량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의 대립은 기층의 일반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개량주의의 요소가 보다 타락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며 고조된 분위기 안에서 그것은 다만 드러나지 않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것이 노련의 임금분배방식과 관련된 자금적립의 방법을 둘러싼 평가의 문제이다. 즉 노련의 소속 노동자는 1일의 임금 전부를 모아 부상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 일을 쉬는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각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분배한다. 이때 노련 및 도중도 각기 1인분의

58) 각각 동아일보 1928년 5월 5일 및 9일자 참조.

59) 『논조』, 22면. 동아일보 1928년 6월 22일 7월 27일 및 중외일보 7월 1일자.

60) 『개황』 참조.

61) 동아일보 1928년 4월 8일자.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공목(空木)이라고 한다. 이러한 분배방식은 그 동안의 연구들에서 노련이 고안해낸 독특한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특히 카나모리는 이를 노동자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된 “조선에서는 이래적인 획기적 제도”⁶²⁾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를 김경식 등 간부의 역할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오류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평균임금제도는 원산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항만 등의 노동관계에서 당시 관행적으로 널리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0년의 항만하역조사를 보면 진남포에서도 이와 비슷한 임금평균분배제도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공목이란 당시의 임금을 목전, 통창 만보로서 일컬었던 것에서 유래한다.⁶³⁾ 이러한 점에서 그것의 기원은 봉건적인 공동체적 관행에 있으며 공목에서의 ‘공’은 ‘거저’ 혹은 ‘공짜로’라는 의미에서 일하지 않고 노는 자가 거저 먹는 돈이라는 가치판단이 들어간 말이다.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는 본질적으로 착취라는 의미함축을 지닌 것이었으며 원산의 경우에도 착취의 성격이 다소 완화되고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적 성격이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 노련의 재정과 회원의 구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례하여 개량주의적 요소는 조합내에서 일정한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며 이는 조합의 민주적 성격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것이었다. 총파업의 패배 이후인 29년 10월에 인쇄직공조합에서 소집한 원산노련대회나 이듬해 1월에 노련 청년부의 주최로 열린 원산쟁의 희생자 환영회 및 보름 후에 열린 원산대파업 기념일에서 “일체 타락간부의 배제” “조합 데모크라시 획득” “봉건적 청부노동계약을 즉시 철폐하자”는 등의 슬로건이 제기되었던 것⁶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같이 임금평균분배제도는 봉건적인 공동체적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노련이 독자적으로 고안해낸 제도는 결코 아니다. 따라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기존의 연구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카나모리의 연구인데 그의 오류는 27년 6월의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획득한 단체계약권에 대한 문제에서도 되풀이된다. 그는 이 파업의 가장 큰 정점이 십장제 폐지에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단체계약권의 획득이라는 의미는

62)金森, 앞의 글의 (1), 22~3면.

63)이규창, 앞의 책, 93~6면 및 114면.

64) 동아일보 1929년 10월 29일, 조선일보 1930년 1월 4일자, 중외일보 1월 19일자.

과소평가되거나 심지어는 당시 조선에서는 단체계약권 그 자체가 지니는 의미를 노동자나 자본가 모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에게 굴러들어온 것⁶⁵⁾이라는 어이없는 설명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은 그가 노련을 오직 경제투쟁이라는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27년 6월은 정치투쟁을 향한 노련의 의식적 지향이 뚜렷한 시기의 한가운데이다. 여기서 노동자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종래 하주와 각 세포단체가 직접 계약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노련의 단체계약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임금을 균일하게 하자는 것⁶⁶⁾이었으며 이는 노련에 대한 공식적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보고에 주목해보자. “임금인상이 본파업의 목적이 아니라 … (파업은) 연합회가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회원상호의 결속지구를 위한 시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의 참된 사명은 금후에 있다. 우리들은 더욱 협동단결하여 강대유력한 회단(會團)을 조성함으로써 단결의식의 주입과 노동자를 권유하여 조직의 확장에 노력”⁶⁷⁾할 것이라고 했다. 카나모리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전혀 도외시하고 파업의 쟁점을 십장제 폐지라는 협소한 시각에 의거하여 인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의 자발성과 계급역량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임금평균분배제도의 문제까지 포함한 이러한 오류는 총파업을 전적으로 경제투쟁이라는 맥락에서 인식한 결과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총파업은 정치투쟁의 발전과정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그것의 과정 자체는 경제투쟁의 양상을 보였지만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련의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총파업은 흔히 말하듯이 지도부의 “탁월한 영도력이나 강력한 지도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조직성과 강인성, 단결력 등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20년대를 거쳐 오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주도와 노동계급 스스로에 의한 의식적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었다. 투쟁은 자본계급과 제국주의를 대상으로 한 것이면서 동시에 개량주의와의 지속적 대립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 노동자계급의 지원에 대하여 원산 쟁의단이 보낸 호소문이 일제에 못지않게 토착

65) 金森, 앞의 글의 (2), 53~6면.

66) 동아일보 1927년 5월 22일자, 조선일보 1929년 4월 28일자 또한 金森, 앞의 글 (2)의 54면에 있는 노련의 3가지 요구사항을 볼 것.

67) 『개황』.

부르조아지와 개량주의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⁶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총파업의 전과정을 놓고 볼 때 자본과 권력은 전쟁의 준비와 전략적 필요에 의한 노련의 박멸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구상으로 일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련의 지도부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이 시종일관 타협과 조정에 의한 합법적 투쟁에만 의존함으로써 파업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하였다. 총파업의 시초에 파업의 방법과 행동은 각 세포단체의 자유의사에 맡긴다는 노련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일이 세포단체와 기층의 노동자들의 주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예컨대 “각 세포단체에서는 각각 자기들이 산병적(散兵的) 작전을 계획하는 중인데 그 중에도 자기 자유로 행하는 규찰대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하는 바대로 직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멀리 인천 등지로 다니며 외지노동자들의 침입을 방지하며 혹은 일하는 한산노동자들의 쉼터 조사와 얼굴 모양을 그려가는 등 비상한 활동을 계속”⁶⁹⁾한다는 기사에서와 같이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규찰임무의 수행이나 선전활동, 규율과 질서의 유지 등에서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파업을 지도하고 이끌어나갔다. 지도부가 자본가들과의 협상과 일제의 알선에 의지하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단결과 규율 및 승리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파업의 종반인 3월 중순 이후에 지도부가 투항적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에도 “지도부의 패배주의와는 달리 파업노동자들의 기세는 여전”하였으며 4월 6일의 자유복업 지령 이후에도 각 세포단체의 노동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초지일관의 산병전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⁷⁰⁾ 총파업의 기저에 있었던 노동계급의 이러한 의식과 활동이 막대한 자본과 정치적 배경에 대항하여 80여일이라는 오랜 기간을 싸울 수 있게 한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총파업 패배 이후에 김경식 등의 지도부는 노련의 지도와 투쟁과정에서 탈락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주도에 의해 노련의 재건이 시도된다. 재건을 위한 첫 시도는 패배 이후에 괴멸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노련의 직공부문에 속하는 인쇄직공조합에서 제기되었다. 노련의 진용을 재정비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일제의 탄압과 금지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9년 12월에 노련의 정기대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신임 집행위원장에 박태선이 선출된다. 곧이어 30년 1월

68) 부산자신문 1929년 3월 13일자(小林, 앞의 글, 42~3면 참조).

69) 동아일보 1929년 1월 26일자.

70) 강동진, 앞의 글, 255면 및 중외일보 1929년 4월 10일자.

에 노련 청년부 주축으로 열린 원산쟁의 희생자 환영회에서는 야간노동임금과 공휴일임금의 전액 지불, 16세 미만 소년노동자의 6시간노동제 획득, 언론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 소년노동자의 야업폐지,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지불, 최저임금제 등 정치적 구호들을 표방하였는데 전균(全均)이나 김용준(金容俊) 등의 사회주의자들이 여기에서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열린 원산대파업기념일 집회에서는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3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8시간 노동제의 획득, 최저임금제 설정, 언론출판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위한 투쟁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노련에서 개량주의적 요소가 배제됨으로써 정치투쟁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노동운동을 비롯한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의 전반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30년 3월에 박태선과 이어서 전균이, 또한 노련의 세포단체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재건에 노력하던 이주하(李舟河)가 공산당 사건으로 검거되는 등⁷¹⁾ 일제는 가혹한 탄압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노련의 재건운동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노련의 간부였던 강기덕(康基德)은 재건노력중 33년 11월에 검거되었다. 비합법운동의 영역에서는 원산공그룹을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노력한 김현제(金顯濟) 등⁷²⁾의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다.

한편 총파업 이후 부득이 함남노동회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어용노조 안에서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총파업중에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함남노동회로 유인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부담으로 노동병원이나 구매조합, 무료숙박소 등의 사업들을 약속한 바 있었다. 물론 이러한 약속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오히려 생활의 최저변에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임금은 파업 이전보다 4할 내지 6할이 감소되었으며 조합의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재판에서는 출입표를 압수하였다. 또는 회비를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지불하는가 하면 운수구역은 6구(區)에서 4구로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원이 일정한 구역의 일을 맡는 것이었던만큼 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고혈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자기

71) 중의일보 1930년 3월 7일자, 김준업·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I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0, 649~50면 및 동아일보 1930년 3월 28일자와 조선일보 5월 11일자.

72) 조선중앙일보 1933년 11월 3일, 28일자 및 동아일보 1934년 4월 13일, 7월 9일, 10일, 17일자 참조.

들이 속한 조합이 “노동단체가 아니라 자본가의 모리단(謀利團)”⁷³⁾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20년대의 정치투쟁을 통하여 조직적 단결과 의식의 고양을 경험하였던 노동자들에게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식민지 경찰은 재빨리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30년 4월에 예정된 함남노동회의 정기총회를 금지하였다. 이리하여 조합의 간부들은 각 세포단체에서 자신들이 임의로 지정한 조장들만을 출석시키고 일반 노동자의 방청을 금지한 가운데 5월 11일에 겨우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형적인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성간부의 불신임안이 제출되고 일반 회원의 발언권이 주장되는가 하면 노동자 중심의 노동회를 건설하자는 요구들이 제기되면서 대회는 “추태를 백출”하였다.⁷⁴⁾ 14일에는 대중선거에 의한 대표의 선출, 회의의 공개, 18일까지의 총회개최 등 21개조의 요구사항이 노동자들의 연서에 의해 노동회에 제출되었다. 믿었던 노동자들에게서까지 배척을 받은 노동회의 간부들은 상의에 교섭하여 각 하주에게 경고문 발송, 해고 등을 교섭하는 한편 주동적 역할을 한 세포단체를 정권처분하고 총회에서 발언한 회원을 모두 제명처분⁷⁵⁾하는 것으로 이에 응답하였다. 21일에는 50여명의 노동자가 고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2천여명의 노동자들은 “우리의 대표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말한 것이 하등의 위법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을 해고하는 것은 곧 우리 전체를 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우리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 (자본가들이) 선전포고한 이상에는 싸우지 않고 자멸하는 것보다 싸우다가 망하는 것이 도리어 떳떳한 일이니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항쟁하겠다”⁷⁶⁾고 하여 소속단체 총연서로 23일에 항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함남노동회로 편입된 이후에도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20년대의 조직적 투쟁에서 단련되어 형성된 노동계급의 의식과 역량이 단절되지 않고 기저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73) 조선일보 1930년 5월 19일자.

74) 조선일보 1930년 5월 14일과 중의일보 5월 25일자 및 30일자.

75) 조선일보 1930년 5월 23일과 24일자.

76) 조선일보 1930년 6월 1일자 또한 5월 25일자 참조.

5. 맺 음 말

마지막으로 총파업이 이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총파업이 그후의 노동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 미친 영향 내지 교훈으로서는 크게 보아 비합법운동의 영역에서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 강력한 전국적 조직의 필요에서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외에도 식민지의 반제투쟁에서 민족개량주의가 지니는 기회주의적 본질이 폭로되었다든지 혹은 노농동맹의 혁명적 결성이 예고되었다거나 노동계급의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었다고 하는 점 등도 아울러 지적되어왔다. 비합법운동에서 정치투쟁의 문제는 총파업이 일제의 정치적 개입과 탄압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노련의 지도부는 합법적 방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패배하였다는 인식에서부터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식민지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합법적·비합법적인 모든 활동양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계급적 역량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반제 정치투쟁의 방향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이후의 추세이다.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노력은 지역연합체로서의 노련이 지니는 조직적 결함과 이것이 식민지의 노동운동에서 지니는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의 전국적 조직과 식민통치자들의 전국적 비호를 받는 일제 자본가들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조직의 지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후 혁명적 전위당을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노동운동에서는 산별노조의 건설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당시 코민테른의 조직적 방침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들과 아울러 총파업 이후에 원산의 노동계급이 겪어야 했던 불행한 행로를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거의 주목되지 않았거나 혹은 주목되었다고 해도 윤형빈의 글에서와 같이 총파업의 강력한 타격으로 일제 자본가들은 임금, 노동시간 및 기타 대우문제에서 일련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⁷⁷⁾는 안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일제 자본가들의 ‘양보’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가혹한 것이었으며 노동계급은 이를 감수해야만 했다. 특히 30년대 이후 일제의 파시즘적 지배가 강화

77) 윤형빈, 앞의 글, 46면.

되어나가는 추세에서 노동자들은 전반적인 빈곤과 열악한 생활상태에 처하게 되는데 원산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총파업 자체가 민족적 대립보다는 계급전의 성격이 더 강했던만큼 그것의 패배는 노동자의 상태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임금이 대폭적으로 감하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자 개개인이 속한 세포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임금감하의 폭은 40~60% 혹은 70% 이상에 달하는⁷⁸⁾ 가혹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비단 원산에만 그치지 않고 함남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까지 파급되었다는 점도 주목되어야 한다. 예컨대 북평에 인접한 신포항에서는 자본가들이 원산의 함남노동회의 사례를 들면서 평균 40% 정도의 임금 인하를 요구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요구는 “만연될 우려가 있다 하여 함남 각지의 산업부문에 속한 노동단체는 크게 긴장된 가운데”⁷⁹⁾ 있었으며 자본가들은 조직적 공동행동을 통하여 총파업의 전리품들을 챙기기에 분주하였다. 이와 아울러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구역의 통합이나 세포단체(즉 도중)의 합병이 단행되었다.⁸⁰⁾ 공황의 타개책으로 이 시기에 진전되고 있었던 이른바 산업합리화정책안에서 파악될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노동강도와 시간의 실질적인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아울러 도중 안에서 노동자나 부상자, 실업자 등이 도태되면서 온정주의의 마지막 영역이 남김없이 파괴되었다.

나아가서 노동자들은 일자리의 확보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경쟁과 충돌 및 난투 속에 휩쓸리게 되었다. 더구나 이는 일터를 둘러싼 노동단체끼리의 경쟁을 의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혈값의 노동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악의적인 계략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함남노동회의 타락 간부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여 자신들의 중간착취의 몫을 늘이는 한편 비회원이나 농촌에서 갓 올라온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이들과 기존의 노동단체들을 대립 경쟁시키는 비열한 방법⁸¹⁾을 통하여 자본의 끊임없는 임금감하의 시도에 일

78) 동아일보 1929년 11월 20일과 21일자 및 조선일보 1930년 5월 19일자.

79) 중외일보 1929년 8월 21일자.

80) 조선일보 1930년 5월 19일 및 25일자.

81) 조선일보 1930년 11월 6일과 7일자, 1931년 1월 23일과 3월 13일자 및 동아일보 1930년 12월 4일, 1931년 3월 16일자 참조.

조하였다.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이나 사상운동이 아니라 생활운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에게 아첨도 해야 하고 (노동자들을) 위협”도 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이들은 위협의 한 방편으로 기존 회원의 “일을 빼앗아서 버릇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게 봉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훈련이 없고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충돌과 난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노동회의 간부들 사이에서 한때 타협되기도 하였으나⁸²⁾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지 못하여 그날그날의 생명을 유지”⁸³⁾하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식민통치의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의 전통과 영향이 기층에 잠재해 있으면서도 현상적으로는 이전의 조직적 규율과 단결, 강인한 투쟁성, 계급적 자존심 및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신하여 상호의 대립과 경쟁, 무기력과 비관주의가 노동계급의 일상으로서 자리잡게 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이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 일본에서의 연구성과들을 논외로 한다면 남한과 북한에서 총파업을 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성격과 요구를 구체적·시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남한에서의 연구는 민족의 범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식민지시기의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총파업의 전행정에서 드러난 각 계급과 계층들의 정치적 입장과 동향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급의 자기의식과 활력 및 이와 대조적인 민족부르조아지의 동요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인식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연구에서는 20년대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이 기본적으로 종파적이고 파벌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궁극적으로는 이 시기 민족해방운동의 과제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30년대 항일무장투쟁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총파업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총파업에서 보여준 노동자들의 조직성과 강인성, 투쟁성 등은 20년대 노동계급 스스로에 의한 의

82) 조선중앙일보 1933년 1월 23일자.

83) 조선일보 1930년 5월 19일자.

식적 노력과 투쟁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의 주도와 지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단순히 종파분자의 책동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무장투쟁이 민족해방투쟁의 최고형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구체적 실태와 영향력의 범위는 아직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당위적이고 이상화되어 제시되는 노동계급의 역할과 성격 또한 현실의 그것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과 실태가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이한 세계관을 둘러싼 갈등은 20년대 노동자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고양되던 시기에도 있었으며 30년대 이후에 노동자들 사이에서 상호경쟁이나 무기력, 비관주의 등이 일상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 것도 이러한 점에 서 있다. 이는 일제 자본계급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따른 패배주의의 승인이란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인식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제기이다. 이와같이 분단현실 아래에서 남과 북에서의 이데올로기적 차이가 총파업의 역사적 인식에 일정한 편향과 왜곡들을 낳게 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총파업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 이병천 편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 논쟁, 창작과비평사, 값 4,000원

* 존 다우닝 저 변혁과 민중언론, 창작과비평사, 값 4,500원

* 여익구 저 민중불교철학, 민족사, 값 4,000원

* 아파나쎬프 저 역사적 유물론, 백두, 값 3,200원
